

광주시민들 80년 5월 그 때 그 각으로 '5·18 명예 지키기' 나섰다



“산천은 안다...”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제1차 시국회의'를 갖고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과 5·18 왜곡·폄하 대책을 논의했다. /최현배기자 choi@



“앞서서 나가니...” '전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26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지역 주요 단체 인사들로 결성된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고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과 왜곡·폄하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대책위는 지난 24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광주시, 국회의원, 5·18 단체,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지도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5·18 역사 왜곡 대책 제1차 시국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5·18 역사 왜곡·폄하 현황과 각계의 대책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광주시교육감, 광주지역 국회의원, 5·18 단체, 법조계, 시민단체, 지역 소재 대학 관계자 등 총 378명(상임위원 40명, 위원 338명)이 참여하는 대책위는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정 추진위 ▲5·18 역사 왜곡 시정 대책위 ▲5·18 정신 계승·선양위 등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하기로 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추진위는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를 항의 방문하고 총리실, 청와대 비서실, 여야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6월 임시국회에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 첫 회의

▶ 임을 위한 행진곡 대책	▶ 5·18 왜곡·폄하 대책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전개	사례 분석 사법적 대응책 마련
보훈처 항의·청 협조 요청	중·고 역사교과서에 추가 수록
6월 임시국회서 결의안 채택	교육부·출판사에 홍보 영상물
유네스코 기록유산 추가등재	헌법 전문에 5·18 정신계승 명시

서 기념곡 지정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무총리, 보훈처장 등을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할 예정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추가 등재도 추진한다.

5·18 왜곡 시정 대책위는 법조계 출신 국회의원과 변호사 등으로 법률 대응위원회를 구성, 5·18 왜곡 사례를 분석하고 사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6월 국회에서 5·18 왜곡·폄하를 처벌하는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5·18 정신 계승위원회는 중·고등 학교 역사 교과서에 5·18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5·18 관련 내용의 추가 수록에 나선다. 교육부와 교과서 출판사에 5·18 기념재단 교재의 부교재 채택을 추진하고 홍보 영상물을 제작·보급한다.

법조계와 연계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의 계승을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강운태 시장은 이날 "오월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국가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오재일 5·18 기념재단 이사장은 "5·18 왜곡과 폄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국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가 주도한 이날 대책위 회의에 5·18 현안에 공동 대응해야 할 전남지사과 전남도의회 의장, 전남도교육감 등 전남지역 주요 인사들은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국 민변 회원 100여명 '5·18 지키기' 단체 참배

전국 각지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들이 5·18 왜곡·폄하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결의하는 뜻으로 5·18 묘지를 참배했다.

민변 회원 100여명은 26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영령들을 추모했다. 추모담에서 회화·분향하고 묘지 곳곳을 둘러본 회원들은 구 묘역인 망월동 묘역까지 이동해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장주영(사법연수원 17기) 회장, 한택근(22기) 부회장, 김도형(24기) 사무총장, 이석태·백승현·김신수 전 회장,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유선호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서울과 광주·전남은 물론 부산·경북, 대구·경남, 대전·충청, 전주·전북, 인천 등 전국 지부에서 대표들을 보냈다. 참석 회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뒤 장소를 옮겨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임신숙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은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시민의 고귀한 저항과 희생으로 법적·역사적 평가가 정립된 5·18을 약의적으로 왜곡·폄하하는 행위가 도를 넘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전국에서 모인 민변 대표자들의 결의를 다지고자 단체 참배를 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두환 2205억원 중 533억 만 내고 "29만원 밖에 없다"

김우중 전 대우회장 23조300억원 중 22조9460억 미납

추징금 미납 실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전 전 대통령의 거액 추징금 납부 현황이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1990년대 중반 세상을 놀라게 한 천문학적 비자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7년 동안 변제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에 불과하고 1672억원을 미납했다.

1997년 무기명채권 188억원과 이자 100여억원이 추징됐고 2000년에는 벤츠 승용차가, 2001년에는 용평리조트 회원권이 경매를 통해 납부됐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집행실적이 부진하자 2003년 그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는 재산명시 신청을 법원에 내 공개 명령을 받아냈다. 이후 서울 연희동 자택의 별채와 가재도구 등을 가압류해 경매 처분했다. 당시 검찰이 재산명시 신청을 내자 전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예금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고 주장해 무성한 뒷발을 남겼다.

사저 경매에 이어 전 전 대통령은 2004년 4월 28억원, 5월 100억원을 각각 납부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08년 은행 채권 추심을 통해 4만7000원을 징수당한 이후 추징금을 내지 않다가 2010년 "강연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300만원을 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납부 시효는 2013년 10월 까지로 연장됐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현재 전체 추징금 전수 4만2262건(금액으로는 25조9248억원) 중 집행된 액수는 3156억원으로 전체의 1%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추징금 23조300억원 중에서 22조9460억원을 미납했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그의 비자금을 관리한 신동아 계열사 김도 전 대표는 재산국외도피죄 등에 따른 연대 추징금 1962억원을 내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등 고위직인 추징금 및 벌금 미납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종두



끝까지 달라붙어 파헤친다

사람사라
주니어 언어문화평생교육원

AIR dream
광주MBC 스피치아카데미



광주MBC 에어드림 스피치 아카데미에서 이루십시오

- 박종산** 전 광주MBC 아나운서, 문화사업국장, 행사팀대 팀장 겸 교수
- 양동아** 전 부산MBC 아나운서, 전 광주MBC 아나운서
- 황정숙** 전 KBS 광주방송총국 MC, 전 KBS 광주방송총국 MC
- 장문정** 전 광주MBC MC, 리포터, 전 광주교통방송 MC
- 최이슬비** 전 TBN 광주교통방송 MC, 리포터, 전 광주MBC MC, 리포터
- 최인호** 전 TBN 광주교통방송 MC, 전 EBS 교육방송 리포터, 전 전남대 평생교육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강사

방송진행자 | 일반인 스피치 | 방송구성작가 | 디베이트(토론) 교사 | 대학생 취업 면접 | 힐링스피치 클럽

교육문의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9(대의동, 한예종빌딩 3층) (주)일과 사람 / 전화: 062-234-0800 / 팩스: 062-234-0801 / 홈페이지: www.lnhac.com